| 위원회 활동 스케치 |

경사노위, 본위원회 서면의결 … 의제업종 대화 결실 최종 추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및 지속가능한 임금제도 개편 원칙 합의 등 6개 안건 합의 소상공인위도 발족, 취약계층 목소리 담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틀 마련

이세종 국내홍보 전문위원 정리

위원회는 20201년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면의결 방식으로 제9차 본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이하 공공기관 합의)를 포함한 6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업종별위원회가 지난 해 마련한 합의다. 본위원회 의결은 최고위급 참여 주체들의 추인으로, 향후 합의 이행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실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 ▲지속가능한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 합의문,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 등 총 6건이었다.

관광산업 합의는 7.28.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관광 업종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고용유지 지원업종 연장 등 조치를 담았다.

배달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합의의 경우, 점점 늘어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원칙과 방향 하에 배달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합의에 포함시켰다.

근로자대표제 관련 합의는 입법적인 불비사항으로 지적받던 근로자대표의 역할을 명확히 한 합의였다. 근로자대표가 경영상 해고의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의 30여 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이나 그럼에도 지금까지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업장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위원 합의는 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것으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임금 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해나간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합의는 공공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신뢰에 기초한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

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며,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과 합리적인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컸다.

작년 11월 출범 이후 정례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노정간 의사소통에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는 이정표를 세우게 됐고, 또한 현안으로 제기되어온 노동이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함에 있어 노정간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과 함께 국민적 동의를 고려한 숙의 과정을 거친 점도 중요하게 평가받게 됐다.

노·정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임금(보수)체계 개편이 노사 간 신뢰와 협력에 기반하여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관련 후속논의를 위한 노·정 대화를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노·정은 올해 4월 2기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연구회 등 의제 설정 과정을 진행키로 하였다. 다만 2기 출범 일정은 연구회 활동 경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부와 노동조합의 대표와 공익위원들은 공공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신뢰에 기초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며, 참여형 기관 운영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다음 사항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에 합의한다.

1.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1.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2. 노동이사제 도입 이전, 공공기관 노사는 자율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과 의장 허가시 의견 개진이 가능토록 하고, 노동조합이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현행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임이사에 선임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한다.

□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및 경영투명성

1. 채용비리, 직장내 성범죄, 협력업체 갑질 등 부정부패 및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2. 사회적경제 관련 3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 공공기관 임금(보수)체계

1. 객관적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보수)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

2. 직무중심 임금(보수)체계 개편은 획일적·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공공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1. 임금피크 인력운영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2. 임금피크 대상인력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지원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3. 후속논의

1.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관련 후속논의를 위한 노·정 대화를 지속한다.

2020.11.18.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경사노위 소상공인위원회 발족, 새로운 사회적 대화 틀 마련

앞서 작년 11월 26일(목)에는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 하현수 전국 상인연합회 회장, 이하 위원회) 발족과 첫 회의가 있었다. 경사노위는 출범 후 사회적 대화의 지평이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확장되는 노력의 일환으로 계층별위원회를 꾸준히 준비해왔다.

작년 8월에는 노동 쪽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비정규직 계층별위원회를 발족시킨 데 이어 이번에 사용자를 대표하는 첫 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이번 발족에 따라 경사노위는 전국 수준의 노사 단체 중심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던 과거 사회적 대화와는 차별화된 대화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게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소상공인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 제안을 추진하며, 필요한 경우 본위원회에 의제 논의를 위한 의안 상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자영업 구조개선', '4차 산업혁명 대응', '소상공인 상생경제 구축'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도 짚어보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은 총 10명으로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을 위원

장으로, 위원으로는 소상공인단체 7명과 전국사용자 단체 2명을 위촉했다. 또한 위원회는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도 초빙했다.

하현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폐해가 소상공인에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위원회가 위기극복 방안 모색은 물론 근본적인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위원장(1명)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위원 (9명)	권오복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
	김영흥	국가재난극복소공인연합회 회장
	정월자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
	전인식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
담당 전문위원	김명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자문위원 명단

성 명	소속 및 직책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종현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연구실장